

# 무역전쟁의 복병 환경장벽

정 승 태  
LG 환경·안전연구원

연초부터 시끄러웠던 미국과 EU의 바나나 수입 논쟁에 이어 유전자변형 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EU의 규제조치가 심각한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초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EU의 조치에 대해 조속히 시장개방을 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작년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공황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무역분쟁 위기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분쟁의 전원지에는 '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그 이면에 국가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90년대 들어 '환경'을 대리전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보다 확대되고 있어 이른바 '환경 무역장벽'이 중요한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 환경무역장벽의 대두

지난 96년 미국은 당시 태국, 말레이시아 등 52개국으로부터의 새우수입에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들 국가가 바다거북에 대한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새우잡이를 했다는 이유였다. 미국내 환경론자들도 새우잡이를 할 때 거북을 보호하는 장치를 한 그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연간 15만마리의 바다거북이 죽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태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3국은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새우 수입금지조치가 환경을 빌미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환경제국주의적 음모라고 비난했다. WTO는 이 문제를 1년 넘게 끌어오다 최종적으로 태국 등 제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의 새우수입 금지조치를 해

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미국은 아직도 그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른바 '새우&바다거북(Shrimp & Turtle) 분쟁'은 선진국들이 환경과 관련한 무역장벽을 쌓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에 세탁기를 팔려면 물이나 전기사용에 관한 EU환경기준을 통과했다는 '에너지 라벨'을 붙여야 한다. 또 7월부터는 EU가 지정한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은 커녕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미국도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서 잡은 참치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들이 작업하는 동태평양 열대 수역에는 참치가 들고래때 아래에 살고 있어 참치를 잡다보면 애꿎은 돌고래도 함께 잡혀 죽는다는 이유다. '돌고래는 안전하다'는 표시가 있는 참치캔만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한 환경 파괴적인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상품이 들어오면 수출국 상품 전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93년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대만을 국제협약상 보호대상인 코벨소 뿔의 최대 소비국으로 지목하고 대만산 운동화, 테니스라켓, 섬유제품, 전자제품 등 전품목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것이 좋은 예이다.

이 같은 무역분쟁은 올해 들어와 보다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미국산 항공기에 부착하게 된 소음방지용 장치에 대해서도 이 장치가 연료효율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비행기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부착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허쉬키트라는 소음기를 장착한 이들 항공기들이 미국쪽 주장과는 달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착륙시 연료 소모량이 50% 이상 커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3월 29일 유럽연합 회원국 교통장관들의 승인을 거쳐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

다. 유럽이 취항을 금지시키면 미국도 초음속 여객기로 소음이 문제가 된 콩코드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허쉬키트가 가장 엄격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소음 기준도 만족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로 불거져 나온 이번 분쟁도 그 배후에는 경제적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허쉬키트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600여대에 달하는 미국적 유럽취항 구형 항공기를 처분하거나 새 엔진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스웨스트 등의 항공사는 허쉬키트를 쓰지 못할 경우 유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10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더욱 높아져 가는 환경무역장벽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게 되면 이 같은 환경무역장벽과 그에 따른 국가간, 지역간 분쟁은 보다 심화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각종 지구 환경협약이 협약차원에서 점차 구속력 있는 의정서(Protocol)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이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불가결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자본과 상품에 대한 국가간 지역간 장벽이 허물어질수록 환경장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는 역설 때문이다.

즉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에 대한 글로벌스탠다드는 선진국의 기준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국이 요구하는 '환경기준'을 개도국이나 여타 국가들도 준수하지 않고는 세계시장에서 생존가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진국에 있는 환경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환경친화적 소비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더 본질적으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은 어떻게해서든 자신의 경쟁력 우위를 '환경기준'이라는 도구를 통해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WTO에 제소된 분쟁건수는 급증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한 분쟁은 90년대 들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7년 전세계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새로 통보한 환경관련 무역규제 조치는 89건으로 80년대 연평균 19건의 4.7배이며 96년(53건)보다 70%나 급증했다. 그 중 대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 이뤄진 규제다.

현재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 중 환경규제의 비율은 11.2%에 이르고 80년대 7.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환경무역분쟁의 이슈 전망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환경 무역장벽과 분쟁이 어떤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새로운 천년에 지구환경과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이다. 이미 지난 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우리나라, 멕시코 등의 선진개도국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은 곧 에너지효율을 높여서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청정연료로 대체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유연성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이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이행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마치 금융상품과 같이 배출권거래가 출현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사무소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자동차 연료효율, 가전제품, 전기기기 등의 에너지효율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이 낮은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EU는 2000년부터 절전형 TV만 판매를 허용할 전망이다.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10W이하인 가전제품만 유통을 허용하고 수입품도 이 기준에 맞출 것으로 요구하면서 냉장고·세탁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럽업체들은 6W의 전력 소비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한편 미국은 승용차의 평균연비가 1갤런당 27.5마일 미만일 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에너지효율 기준의 상향조정은 기술적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상품진입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된 프레온 가스와 같은 온실가스 사용에 대한 대체요구가 높아 대체냉매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부상된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제, 유전자변형 식품 수입금지 조치, 환경호르몬 물질 규제 등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유전자 변형식품을 둘러싼 무역분쟁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제1차 국제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 선진국의 반대로 의정서를 체결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회의의 최대쟁점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규제범위와

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경우의 보상문제였다. 개도국들은 현재 아무 제한 없이 수출되는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대해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상대국에 전달해 허가를 받고, 환경 파괴나 인적피해가 났을 경우 배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 캐나다 등의 곡물 수출국은 또 하나의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로써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당분간 각국이 자체로 마련한 안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국제적인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국제적인 환경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전기·전자 업계는 에너지 고효율 상품을 개발하고 자동차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비가 좋은 자동차개발에 주목하고 화학업계에서는 일명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에 대한 대체 물질 개발 등에 노력 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역전쟁에서 '환경장벽'이라는 무기를 통해 자신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선진국을 염두에 둘 때 다가올 새 천년을 위한 준비는 환경장벽이란 복병에 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環境保全**

〈환경무역장벽의 주요 사례〉

	시행국가	내 용
에코라벨(Eco Label)	EU	98년말 12개 품목(세탁기, 화장지, 세척제, 냉장고, 전구 등) 적용. 향후 개인용 PC, 삼푸, 청소용품, 건전지 등 11개 품목 확대 검토
포장재 및 포장재 쓰레기 규제	EU	98년부터 시행. 포장재 중금속 용량 한도가 600ppm에서 올 7월 250ppm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
에너지라벨링 제도	EU	96년 4월부터 시행. 세탁기, 냉장고 등에 EU의 표준 에너지라벨 부착을 의무화 함. 미부착시 판매금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EU	승용차의 CO <sub>2</sub> 배출량 수준을 186g/km에서 2008년까지 140g/km로 낮추어야 함(현재 한국 승용차는 200g/km 수준)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 강화	미국 EU	CFCs, 할론 등의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판매, 사용 금지시기를 몬트리올의정서보다 앞당기는 한편 규제 강화
정제된 가솔린 사용의무	미국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정제된 가솔린 사용 의무화, 배기가스기준을 상향조정
새우수입금지	미국	96년 5월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갖추지 않고조업하는 국가들로부터 새우수입 금지
수퍼펀드세	미국	수입석유제품에 대해 배럴당 11.1% 세금부과